

이슈브리프 841호  
(2026. 5.13)

## 국정원법 개정과 경제안보 시대 국가정보체계의 전환 — ‘경제안보형 정보기관’으로의 역할 확대와 정책적 함의 —

# 제841호

김현중 nicolas0121@inss.re.kr



## 국문초록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한국 국가정보 체계가 기존의 방첩·대공 중심 구조에서 경제·기술·공급망 중심의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첨단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산업기술 유출, 해외 영향력 활동 확대 등 최근의 국제안보 환경 변화는 경제·산업·기술 영역을 단순한 민간경제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AI·바이오·배터리·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과 국가 생존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 기관의 역할 역시 기존의 방첩 및 대공 기능을 넘어 경제·기술·산업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는 추세이다. 실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를 국가정보 및 방첩 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국가안보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정보기관 역시 전략산업 보호와 기술주권 확보를 담당하는 “경제안보형 정보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 이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경제안보를 국가 정보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가진다.

주제어 : 국정원법 개정, 경제안보, 정보기관, 기술방첩, 공급망 안보, 연구안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한국 국가안보 체계 전반이 기존의 방첩·대공 중심 구조에서 경제·기술·공급망 중심의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 논의는 단순한 조직 권한 조정이나 정보기관 기능 재배분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개념 자체가 산업·기술·경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 경쟁, 산업기술 유출, 해외 영향력 활동, 경제적 강압 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와 산업, 기술 영역이 더 이상 단순 민간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반도체·AI·바이오·배터리·양자기술·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생존과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기관의 역할 역시 전통적 방첩·대공 기능을 넘어 경제·기술·산업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안보 환경은 군사위협과 경제위협, 사이버위협, 기술경쟁이 상호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의 양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과거 냉전기 방첩이 군사기밀 유출 및 간첩 색출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산업기술 탈취, 연구데이터 유출, 공급망 교란, 해외 영향력 활동, 전략산업 인력 유출 등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를 국가정보 및 방첩 체계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안보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정보기관 역시 전략산업 보호와 기술주권 확보를 담당하는 “경제안보형 정보기관”으로 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최근 한국의 국정원법 개정 논의 역시 경제안보를 국가정보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제도화하려는 흐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전통적 방첩 개념을 넘어 경제안보 개념의 법·제도적 명문화

이번 국정원법 개정 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안보의 범주 자체가 기존의 방첩·대공 중심 구조를 넘어 경제·산업·기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의 국가정보 활동은 북한 및 군사안보 위협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방첩(counterintelligence) 역시 간첩 색출과 국가기밀 보호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공급망 교란, 해외 경제적 압박, 전략 산업 대상 사이버 공격 및 국가 배후 해외기업의 적대적 M&A를 통한 기술·지적자본의 강제 침탈 등이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바이오·양자기술 등 첨단 전략산업은 단순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전략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위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의 주요 타겟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정부 및 외국 정보기관, 해외 기업 등이 연구기관·대학·첨단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와 인재확보를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공급망 의존성과 경제적 강압 역시 국가전략 차원의 취약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는 더 이상 산업부나 통상당국만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정보와 방첩 체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 개정 논의는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를 국가정보 활동의 새로운 핵심 영역으로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기존 국정원의 역할이 북한 및 군사안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략산업 보호, 공급망 분석, 기술 유출 대응, 산업보호, 연구보안(research security), 해외 영향력 대응 등 경제안보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최근 국가안보 논의에서는 반도체 공정기술, AI 모델, 바이오 데이터, 핵심 인력, 연구성과 등이 단순 민간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가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방첩

개념 자체의 변화 역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의 중심축이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기술안보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가능하다.

### 주요국의 경제안보형 정보기관 모델 확산

주요국들은 최근 경제·기술·공급망 영역을 국가안보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재정의하면서, 정보기관 및 국가안보 체계를 “경제안보형 모델”로 재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냉전기 CIA의 Economic Intelligence 개념과 EO 12333<sup>1)</sup> 등을 통해 이미 경제·산업·기업 영역을 국가정보 활동의 범주로 포함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반도체·AI·바이오·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와 정보활동을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EO 12333은 외국세력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활동 역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정보와 산업방첩 개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된다.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 역시 국가주권과 전략산업 보호를 핵심 임무로 제시하며 경제정보·사이버·기술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DGSE는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단순 해외첩보 수집이 아니라 국가 핵심이익(vital interests)을 보호하는 전략정보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정보·산업정보·사이버안보·해외 영향력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융합형 정보기관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sup>2)</sup> 이는 정보기관이 단순 정보수집 기관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과 기술주권을 보호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미 중앙정보국(CIA), “Executive Order No. 12333 of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Dec 4, 1981) 46 F.R.59941: 자료공개승인 2011.05.05.: 일련번호 CIA-RDP10C02232R000100190004-6,

2) DGSE 웹사이트, <https://www.dgse.gouv.fr/en/get-to-know-us/who-are-we> (방문일 2026.05.12.)

영국은 MI5 산하에 국가보호안보청(NPSA: National Protective Security Authority)을 신설하여 산업·학계·연구기관 대상 기술 보호 및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적대 국가(hostile states)에 의한 산업기술 탈취와 연구성과 유출, 공급망 침투, 해외 영향력 활동 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연구·산업 영역을 새로운 안보 프론트라인(frontline)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sup>3)</sup> 특히 NPSA는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대응 체계를 제공하면서, 정보기관과 민간 영역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일 또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과 중국 공급망 리스크를 계기로 기존 안보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안보·기술보호·사이버·공급망 분석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기관 및 국가안보 체계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최근 독일 내 논의에서는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 구조만으로는 신종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산업정책·경제정책·정보활동·기술보호를 통합하는 “whole-of-government” 접근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경제안보 기능 확대 필요성 역시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추진법(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을 통해 공급망·핵심기술·연구보안 체계를 제도화한 이후, 경제안보 이슈가 외교·산업·정보·방첩 영역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신설하기로 결정된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국(National Intelligence Bureau)”에서 경제안보 이슈를 통합적으로 조정·분석할 필요성까지 조직신설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sup>5)</sup> 특히 일본은 경제간첩(economic espionage),

3) Security Service MI5, “New body will help the UK combat national security threats,” *News and Speeches*, published on Mar 13, 2023, (방문일 2026.05.12.) <https://www.mi5.gov.uk/news/new-body-will-help-the-uk-combat-national-security-threats>

4) Thorsten Benner, Jakob Hensing, and Florian Klumpp, “Updating Germany’s Security Apparatus,” *Internationale Politik Quarterly*, Feb 24, 2025, available at <https://ip-quarterly.com/en/updating-germanys-security-apparatus>

5) Akasaka International Law, Patent & Accounting Office, “Japan’s Anti-Spy Law &

첨단기술 유출, 연구데이터 보호 등을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군사·외교 중심 정보체계를 넘어 경제·기술·산업 영역을 포괄하는 정보·방첩 기능 확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요국 전반에서 경제안보가 단순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정보·방첩·연구보안·기술주권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안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역할 역시 전통적 방첩·대공 중심에서 경제·기술·산업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정원 역할 재조정의 필요성

경제안보 시대에는 정보기관의 역할 역시 기존의 군사·대북 정보 중심 구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조선·AI·바이오 등 글로벌 전략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공급망 충격과 기술유출, 해외 경제적 압박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북한·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산업스파이 활동과 해외 영향력 공작, 사이버 침투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기술 영역은 사실상 새로운 방첩 전선(frontline)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원은 단순 정보수집 기관을 넘어:

- △ 해외 산업정보 분석    △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    △ 국가핵심기술 보호
- △ 경제적 강압 대응    △ 산업·연구보안 지원    △ 해외 영향력 활동 탐지

등을 수행하는 경제안보형 정보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안보 위협은 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존 군사안보 중심 접근과는 다른 형태의 민관

협력 체계가 요구된다. 미국·영국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정보기관은 단순 기밀정보 수집을 넘어 민간 부문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보호 지원, 연구보안 체계 구축 등 “국가경제안보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경제안보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체계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예상 쟁점 및 후속 과제

경제안보 기능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보기관 권한 확대 논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산업 영역은 민간기업·연구기관·대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정보수집, 기업 활동 위축, 연구자율성 침해, 권한 남용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될 소지가 있다. 여기서 경제안보 활동은 산업정책과 기업활동, 연구협력, 국제학술교류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보기관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제안보 기능 확대가 단순 권한 강화 차원으로 접근될 경우, 민간 영역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정원의 경제안보 기능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 국회 감시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안보 활동은 민간 산업 및 연구 영역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정보기관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국회 및 민주적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한 감시나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보안 및 기술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는 단일 기관만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범정부적 거버넌스 구축 역시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경제

안보 체계는 산업부·외교부·과기부·국정원·검찰·경찰·국가안보실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으며, 전략적 조정 기능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미국식 NSC 중심 통합조정 모델이나 일본식 경제안전보장추진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래 <표1>에서 보듯이 미국식 모델이 백악관 NSC를 중심으로 경제·기술·산업·공급망 정책을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일본식 모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중심으로 공급망·기간인프라·핵심기술·특허관리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표1> 美 NSC 모델과 日 경제안전보장추진체계 모델 비교

구분	미국식 NSC 중심 모델	일본식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
기본 성격	국가안보 중심 전략조정	경제안보의 법제화 행정 체계화
핵심 기관	백악관 NSC	NSS, 경제안전보장 담당대신
운영 방식	대통령 중심 범정부 조정	법률 기반 상시 관리체계
주요 기능	공급망, 대중견제, 기술통제 조정	공급망, 인프라, 핵심기술 특허 관리
특징	전략, 외교, 안보 중심	산업, 기술, 행정 통합 관리
정책 목표	지정학 경쟁 대응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

미국은 NSC 중심의 범정부 전략조정 기능을 통해 반도체·AI·바이오·공급망·대중 기술통제 정책 등을 조율하되, 실제 집행은 상무부(BIS), 재무부(CFIUS), 국방부 등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분산형 구조에 가깝다. 반면 일본은 2020년 국가안전보장국(NSS) 내 ‘경제반’을 신설하고, 이후 경제안전보장 담당대신 및 경제안전보장법제 준비실을 설치한 뒤,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안보를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과 전략적 불가결성(strategic indispensability)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sup>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여러 장·단점들을 보완해가며 향후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략조정 기능과 함께 공급망·핵심기술·연구보안·기간인프라 등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제도화된 경제안보 추진체계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성숙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최근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한국 국가안보 체계 자체가 방첩·대공 중심 구조에서 경제·기술·공급망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 가능하다. 향후 경제안보 경쟁은 반도체·AI·바이오·핵심광물·디지털 인프라·해저 케이블·에너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역시 전략산업과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성을 보호하는 “경제안보형 정보기관”으로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 권한 확대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민관 협력, 법적 정당성 확보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철저한 Action-Plan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6) 홍의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분석,” 이슈페이퍼 22-21-1, 한국법제연구원